



주간통일정세 2009-21(2009.05.19~05.2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2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함북 연사 ‘혁명전적지’ 시찰(5/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일제 말기 자신의 부모인 김일성, 김정숙이 두 차례 활동했다는 사지봉혁명전적지 등과 연사혁명사적관을 둘러본 뒤 “수령님(김일성)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센 뿌리”이고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혁명전통교양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며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비서, 장성택·박남기 당 부장, 리제강·리제일 당 1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했고, 현지에서 박수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박동일 연사군 당 책임비서 등이 김 위원장을 영접

##### ● 김정일, 공군부대 시찰(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군 제814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김위원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참관한 뒤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말했으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밝히지 않음. 김위원장은 시찰을 마친 뒤 부대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으며 이번 시찰에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현철해 리명수 대장 등이 수행

##### ● 김정일, 함남 검덕광산 현지지도(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단천시의 검덕지구 광산들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김 위원장은 먼저 대흥청년영웅광산을 방문해 광산마을을 둘러봤으며, 북한 최대의 납·아연 생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시찰하고 기술개건(改建) 상황과 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룡양광산에서는 6월5일 직접 갯에 들어가 채굴 상황을 살펴봤다고 통신은 보도,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수행



## 나. 정치 관련

### ● 北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보도(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전 남조선대통령 노무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에 의하면 전 남조선 대통령 노무현이 5월 23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한다"며 "내외신들은 그의 사망동기를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과 연관시켜 보도하고 있다"고만 논평없이 짧막하게 보도

### ● 北, 개성 실무접촉 결렬 위기는 南 탓(5/23, 통일신보; 5/24,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최근호(5.23)에서 개성공단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결렬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남측 보수당국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
- 24일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대결분자들의 비열한 여론 날조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측이 "현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해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했으나 남측이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등 '의제 밖의 문제'로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해 왔다고 비난
- 신문은 남측의 유씨 문제 제기는 개성공단 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개성공업지구문제를 대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수 없게 만든 장본인은 남조선보수당국"로 이들이 "아무리 오그랑수(속임수)를 써도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

### ● 민주조선, 南, 개성공단 폐쇄 속셈 비난(5/23,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23일 '검은 속심이 깔린 여론조작놀음'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측의 개성공단관련 조치들에 대해 남측이 "시비하는 여론조작 놀음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며 이는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신문은 "그러나 이명박 패당과 보수세력이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북남협력 사업들을 차단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까지 완전히 폐쇄해버린다면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북한이 관련 법규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집행해도 되지만 "남측에 재협상 기회"를 주었는데 남측이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고 "반공화국 감빠



니아(반북 캠페인) 소동을 벌이는 데만 급급”해 “협상을 통해 논의 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지난 15일 공단관련 법규와 계약들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법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 **北단체, 南노동계 반정부 투쟁 선동(5/23, 조선중앙방송; 직총중앙위 대변인 담화)**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는 남한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
- 직총 중앙위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인 고(故) 박종태 씨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 “법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규정했다고 비난하고 남한 노동자들이 “정권 타도의 구호를 억세계 틀어쥐고 결판을 볼 때까지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할 것을 선동

● **北최태복, 대북 대결정책이 통일에 난관(5/23, 연합)**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22일 ‘무산지구전투 승리’ 70주년을 맞아 이 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열린 중앙보고회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통일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침이 이뤄진다면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최 비서는 이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것”이라며 “불굴의 정신력과 온갖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의 해로 빛내자”라고 강조
- 보고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등이 참석

● **北, 美 국방예산 증액 계획 비난(5/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의 변함없는 패권주의적 야심’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2010회계연도 국방예산 증액 방침은 “미국에서 정권이 골백번 바뀌어도 ‘군사적 힘의 우위’에 기초한 미제의 세계제패 야망, 패권주의적 야심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의회에 제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4% 늘어난 5천340억 달러로 책정한 사실을 비난
-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겨냥, “이전 행정부 시기에 강행 추진되던 침략적인 ‘반테러전’의 무대를 파키스탄 영내에서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고 이란의 평화적인 핵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압박



도수를 높이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위협 공갈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

● **北, 인터넷 활용 대의 홍보·선전(5/22, 연합)**

- 북한이 최근 미국의 온라인 소셜네트워킹 사이트(SNS)인 ‘트위터’를 이용해 해외에서 조선중앙통신 영문기사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유무선 연동 미니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터는 북한 뉴스 웹페이지 ([http://twitter.com/kcna\\_dprk](http://twitter.com/kcna_dprk))를 통해 중앙통신이 송고한 일부 영문기사들을 제공
- 컴퓨터처럼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가진 사용자는 트위터에 가입한 뒤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중앙통신의 영문기사 제목이 휴대전화로 제공
- 이 휴대전화용 웹페이지는 “공화국(북한)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보려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새로 개설됐으며 이곳에선 “매일 보도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중요 보도들을 비롯한 평양 소식을 볼 수 있다”고 우리민족끼리는 말했으나 구체적인 이용방법이나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종 등은 밝히지 않음.

● **北헌법,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 명기(5/22,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있던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로 개정
- 김 위원장의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임.

● **작가들에게도 150일전투 문학작품 주문(5/9, 문학신문)**

- 북한이 새로 시작한 속도전인 ‘15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자원을 ‘150일 전투’에 집중하는 가운데 작가들에게도 이를 위한 문학작품의 대량생산을 주문
- 문학신문은 9일 ‘150일 전투’에 고무 추동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어 이를 “고무 추동하는 문학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위대성과 불



멸의 업적”을 알리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속명’, ‘봄향기’, ‘새벽산책’ 등의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고 전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담은 현실 주제”를 다룰 것을 제시

● **北, 150일전투에 총력, 주민통제 강화(제13호, 열린북한통신; 제297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이 새로 시작한 속도전인 ‘15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150일 전투지원에 물자지원 등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대북 소식지들이 잇따라 전언
-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은 최근호(제13호)에서 북한 소식통을 인용, “150일 전투 시작 이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오전 9시~정오 사이에는 거리 통행이 금지됐고, 장마당의 개장 시간도 오후 2시에서 4시로 늦춰졌다고 소개
- 소식지는 “주민 단속을 위해 보안일꾼들과 근로단체의 단속성원들이 거리마다 배치됐다”며 이들은 “오전에 거리를 순찰하면서 통행하는 사람들을 잡거나 시장 개·폐장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이들을 단속한다”고 설명, 단속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강제로 보내기 전투장에 배치해 하루 또는 며칠 동안 강제노동을 하거나 며칠씩 동원되는 형에 처해짐.
- ‘오늘의 북한소식’ 제279호도 “7일 쫓기모임을 시작으로 150일 전투가 본격 시작됐다”며 “전투기간 중앙당과 지방당의 간부들은 일제히 생산 현장에 파견된다”고 소개, 소식지는 “현장의 생산활동 정상화”가 간부 파견의 주요 목적이며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화를 거쳐 간부직을 내놓아야 하며 해당 단위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전언

● **北, 南 반공영화 상영…모략책동(5/19,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문학예술분과위원회는 19일 남한에서 반공 영화와 드라마가 대대적으로 제작·방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모략책동을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 이 단체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고 북남 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반공영화와 TV극들이 대대적으로 제작, 방영되고 있다”며 “공화국 현실을 심히 왜곡한 외국영화들까지 상영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영화와 드라마의 구체적인 제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美와 대화도, 문건도 많았지만(5/19 연합)**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대시 정책”을 펼칠수록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의장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뿔(공)은 우리에게 넘어갔다는 식으로 공갈”하고 있지만 이는 “사태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것”이며 “뿔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안고 있다”고 주장

#### 다. 경제 관련

##### ● 미 민간단체들 대북지원사업 활발(5/2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월드비전’은 6월 3일부터 열흘간 방북해 최근 북한에 보낸 밀가루와 콩이 제대로 도착해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북한 당국과 사업계획을 논의할 계획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3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북, 개성과 사리원에 있는 병원의 낡은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진행
- ‘머시 코’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문제에 관계없이 지난 몇년 간 지원한 과수원과 양어장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는 북한에 식량, 의료, 농업 분야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최근 음악과 영어 분야로도 활동 반경을 넓혔다고 RFA는 소개
- GRS는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인 지난달 중순 평양에서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미국의 유명 음악단체 ‘캐스팅 크라운스’와 ‘애니 모세스 밴드’를 출연시켰으며,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북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칠 강사를 모집하고 북한의 무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용 영어회화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

##### ● UNDP실무진 방북, 지원사업 재개 논의중(5/2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 실무진 4명이 19일 방북, 2년째 중단된 대북 지원사업의 재개와 이를 위한 사무소 재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UNDP의 스테판 듀자릭 대변인은 “현재 이들 4명이 평양의 임시사무소에서 머물며 북측 관계자들과 북한에서 재개하게 될 사업 내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 직원과 북측 직원의 채용도 이미 공고했다”고 밝힘. 그는 평양의 UNDP 사무소는 내달 보수공사를 마치면 다시 문을 열지만 “UNDP의 대북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업 재개 시기는 실무진들이 가져온 북측과의 협의 결과를 다시 검토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언급



- **北, 휴대전화용 웹페이지 개설(5/2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여명’이 “해내외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최근 휴대전화용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보도
  - 이 휴대전화용 웹페이지는 “공화국(북한)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보려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새로 개설됐으며 이곳에선 “매일 보도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중요 보도들을 비롯한 평양 소식을 볼 수 있다”고 우리민족끼리는 말했으나 구체적인 이용방법이나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종 등은 밝히지 않음.
  
- **北, 차나무 대대적 재배 성공 주장(5/12, 민주조선)**
  - 북한이 차나무를 대대적으로 재배, 건강음료인 녹차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민주조선이 12일 보도
  - 신문은 “자연 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차나무 재배를 할 수 없다고 하던 우리나라(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그 재배를 실현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녹차를 생산”하게 됐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차 이름을 ‘은정차’로 부르도록 했다고 소개

라. 군사 관련

- **北, 동해안서 지대지미사일 발사 징후(5/22, 연합)**
  - 북한이 함경도 김책시 일원의 동해안에서 지대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북한이 2~3일 전 함경도 일원 동해안에 선박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이 포착됐으며 함경도 일원 동해안에 2~3일 전부터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언급
  - 소식통은 “현재 북한의 군사동향으로 미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각종 포사격 훈련 때 통상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동해안을 순시하다가 북한의 통신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이날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 연안 약 130km 해역을 이달 30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음.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생물다양성 보호사업 활발(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소개, 통신은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기술연구센터의 과학자들은 조선(북한)의 자연보호구들과 전국 각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그 다양성 평가 방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소개

- 한편 “동물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시킬 데 대한 국가정책”에 따라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조선자연보호연맹 등은 5~10년마다 정기적으로 동물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22)’에 즈음해 과학기술발표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 남북불교도, 日약탈 문화재 반환 합동법회(5/22, 조선중앙통신)

- 남북한 불자들이 22일 북한 평양시 대성산 광법사에서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촉구 북남불교도 합동법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법회에는 남측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등이, 북측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전국신도회가 참석했으며 공동발원문 봉독에 이어 반일 공동성명을 채택, 공동성명은 “일본이 조선 민족의 대일 원한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라”며 “무도한 독도 강탈책동과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약탈해간 우리 민족 문화재들을 무조건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 중앙신도회는 이번 방북기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비를 2005년 돌려받은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문화재 반환운동의 전반적 방향과 남은 과제 등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

#### ● ‘세계컵’ 체조대회에서 큰 성과(5/21, 조선중앙방송)

- 북한 체조선수들이 영국에서 열린 ‘세계컵’ 체조대회에서 금1, 은1의 성적을 올리고 21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대회에서 김진혁은 남자 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리세광은 조마에서 은메달을 각각 따냄.

#### ● 北, 광천 등 자연치료자원 총서 발간(5/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각종 휴양지와 광천, 치료용 감탕(진흙) 등에 관한 정보를 한 데 모은 3권짜리 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총서’가 출판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장수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소개
- 도서에는 “광천, 치료용 감탕에 대한 역사적 개괄과 특성, 지역별 광천자원들의 위치와 성분분석 연구자료, 산천수 치료자원의 위생학적 및 건강장수학적 평가와 특성, 조선(북한) 기후의 계절별, 요소별, 지대별 특성과 기후치료 자원의 특성에 따르는 기후요양지, 휴양지 설정과 그 의학적 평가” 등이 서술돼 있음.



- **북한에 정구 열풍(2009년 5월호, 조국)**
  - 잡지는 ‘정구장에서 느낀 군중 체육 분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봄을 맞은 지금 평양체육관 곁에 꾸러진 야외 정구장은 정구를 치는 사람들로 흥성거린다”며 몇 년 전부터 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
- **北 봄철 약초·약용식물 재배 강조(5/12, 민주조선)**
  - 민주조선 12일 ‘약초 자원을 적극 늘여나가자’라는 글에서 “약초 재배사업은 나라의 고려약(한약) 자원을 풍부히 하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봄철 약초재배 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소개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조선신보, 美에 ‘대담한 접근법’ 촉구(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3일 ‘적대시 정책에 변화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악화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담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며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은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채 조선(북한)이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내버려두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외교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임시방편이 있을 뿐 변화는 구호만으로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
  - 신문은 북한의 정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등을 거론, “변화를 제창하는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조(북)·미관계는 부시 정권 말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무성 대변인이 비핵화 염원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언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담한 접근법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측에서 상당히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전달해야 조선(북한)측이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
  - 또 “오바마 정권은 클린턴, 부시 시절의 대조선 정책에서 교훈을 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높이에서의 대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처지”라고 전제한 후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에 ‘페리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페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신문은 주장



● **美, 北, 도발적 행위 하지 말아야(5/22, 미 국무부)**

- 이언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장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투명하고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최상의 방법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일로 믿고 있다”며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또 켈리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열심히 뛰면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

● **北 핵불능화 안하면 한 푼도 없다(5/22, 조선일보)**

-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국 국무장관이 연일 북한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20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약속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단 1달러도 북한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그는 국무부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에 대비한 9800만달러의 대북 경제지원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Brownback) 의원이 “이 돈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뇌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하자, 클린턴 장관은 “전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재차 확실히 밝힌다”고 답했다.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의 대북 경제지원 예산은 북한이 행동을 바꿔 합의를 이행할 경우를 대비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

● **오바마, 핵무기 위협 감소·제거 최우선(5/19,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핵무기 위협 감소와 궁극적인 제거를 주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라고 밝힘.
- 그는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하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이(핵 비확산)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일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면서 “NPT를 소생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해 핵무기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고 NPT체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
- 이와 함께 그는 “CTBT도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美합참의장, 北2차핵실험 준비여부 NCND(5/19, 연합뉴스)**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18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2차 핵실험 문제에 우려를 표명, 그는 특히 “그가 핵실험들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나는 이를 어느쪽으로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소위 ‘NCND’ 입장을 보임.

● **美, 北, 여기서 면담허용 좋은일**

- 미국은 18일 북한이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과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간의 면담을 허용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 기자들을 스웨덴 대사가 면담토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확실히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

나. 북·일 관계

● **北, 日우경화 경계(5/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일본의 우익 사조를 경계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에서 “보수적인 우익풍조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에 철저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강조  
- 통신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폐기 논의,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을 지적, “일본의 우경화의 위험성은 군국주의 부활에 있다”며 “일본 우익반동들의 군국주의적 야망은 동아시아를 훨씬 벗어나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

● **日, 대북 중고 탱크로리 수출업자 영장(5/19, 산케이신문)**

- 일본 효고(兵庫)현 경찰은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될 수 있어 북한 등에 수출을 금지한 대형 탱크로리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교토(京都)의 한 중고차판매회사 대표(5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 이 업자가 거래한 북한의 상사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돼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조선백호7무역회사’라고 신문은 소개

다. 기타외교 관계

● **김영남, 印尼 의회대표단 면담(5/2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중인 아궁 락소노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의회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인도네시아 의회 대표단은 방북기간 만경대와 주체사상탑, 평양수예연구소, 만경대학 생소년궁전 등을 참관



### 3. 대남정세

#### ● 北, 개성기업들에 경영실적 제출 독촉(5/22, 통일부)

- 북측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전년도 경영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짐. 북측 개성공단 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최근 회계검증에 필요한 입주기업들의 경영실적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에 제출을 독촉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원래 개성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3월31일까지 투자액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 등 총 62개 업체가 전년도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3분의 1 정도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북측이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작년에도 상당수 업체들이 2007년도분 회계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북측의 독촉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언

#### ● 北, 방북·반출 선별허용에 강한 불만 표시(5/22, 연합)

-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 발사 정국 이후 최근 방북하는 대북 인도 지원 단체 관계자들에게 통일부가 방북과 대북 물자 반출을 엄격하게 선별 허용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실무자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어린이재단의 관계자는 22일 “북측에서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방북하고 반출하면 아예 민간 교류 자체를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언, 역시 최근 금강산이 있는 고성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관계자는 “우리 단체는 남북간 양돈 협력사업의 파트너가 아닌데도, 북측 관계자는 우리에게 대북 물자 반출 제한으로 인해 돼지사료가 안 들어온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 언급

#### ● 개성공단 일부업체 집단휴가 조치(5/21, 연합)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사업 불안으로 주문량이 줄어든 결과 최근 일부 기업의 경우 일감이 떨어지자 북측 근로자들을 집단휴가 보내는 등 경비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 업체들은 기본급의 70%인 50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통상 임금의 절반 수준
-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휴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근로자들이 기본급의 70% 정도는 받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정작 문제는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발트너 “北, 6자회담 조속히 복귀해야”(5/23)

-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 격인 페레로 발트너 EU 대외관계 집행위원은 23일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발트너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의 미사일(장거리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북한에서 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핵화 검증요원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트너 위원은 마무리 협상을 남겨두고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올해 타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오늘 두 정상에 보여준 의지”라며 “곧 협상이 다시 시작돼 빨리 타결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그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대해서는 “이는 교육, 과학기술, 공정경쟁, 에너지 협력 등을 규정한 글로벌 협정”이라며 “개정이 마무리된다면 역사상 최초의 산업화한 국가들간 포괄적 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한-EU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EU 의장국인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24일 귀국함.

##### ● 美합참의장, 北 2차 핵실험 준비여부“NCND”(5/19)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18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2차 핵실험 문제에 우려를 표명함. 멀린 합참의장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국방관련 토론회에 참석,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김정일)가 핵무기들을 보유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려스럽다”고 밝힘.
- 멀린 합참의장은 이어 “북한 지도자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결정을 홀로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가 과거에도 행했던 것으로 새로운 전략이 아니다”고 말함. 그는



특히 “그가 핵실험들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면서 “나는 이를 어느쪽으로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소위 ‘NCND’ 입장을 보임.

- 미군 합참의장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중이라는 보도를 적극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그는 북한 지도부가 점점 더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를 계속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멀린 합참의장은 또 “서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역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세계에도 극히 중요하다”면서 “그(북 지도자)가 점점 호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개입(engage)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그는 북한 지도부의 호전적 입장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라면서 “내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함.
- 한편 올해 들어 미국은 지난 2월 리언 파네타 CIA(중앙정보국) 국장의 의회청문회 답변, 국가정보위(NIS)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기도 함. 그러나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

#### ● 美, 北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우려 또 제기(5/18)

- 미국 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최근 다시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함. 18일 미 의회에 따르면 ODNI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량파괴무기 및 첨단무기와 관련된 기술 획득 보고서(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Covering 1 January to 31 December 2008)’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거론함.
- 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핵관련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의 일부를 불가능화했지만, 우리는 적어도 과거에 북한이 우라늄농축 능력을 추구했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보고서는 “정보기관 내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증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음.
- 부시 행정부 시절에 나온 2007년 ODNI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에 핵무기용으로 판단되는 우라늄농축 능력을 추구했다는 것을 상당한 확신(high confidence)을 갖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점은 보통 이상의 확신(at least moderate



confidence)을 갖고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이 과거에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는 지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북한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자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경수로 발전소 자체 건설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 등을 언급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함.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음.
-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음. 지난 2월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수장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이유로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과거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규명을 강조했었음. 하지만 미국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최근 발간한 ‘미국의 핵무기 정책(U.S. Nuclear Weapons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는지 혹은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었음.
- 이와 함께 ODNI 보고서는 북한이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교한 탄도 미사일의 개발·생산·실전배치를 계속 추구해 왔으며 “북한은 미사일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망을 통해 원재료 및 부품을 계속 구매해왔다”고 지적함. 또 북한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 동안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원재료, 전문기술, 전체 미사일 시스템 등을 수출했다고 주장함.

#### 나. 미·북 관계

##### ● 조선신보, 美에 ‘대담한 접근법’ 촉구(5/23)

-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악화된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담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며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음.
- 신문은 ‘적대시 정책에 변화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정권은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채 조선(북한)이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내버려두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외교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임시방편이 있을 뿐 변화는 구호만으로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북한의 정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



장성명 채택 등을 거론, “변화를 제창하는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조(북)·미관계는 부시 정권 말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무성 대변인이 비핵화 염원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언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담한 접근법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측에서 상당히 뚜렷한 정책전환 의지를 전달해야 조선(북한)측이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정권은 클린턴, 부시 시절의 대조선 정책에서 교훈을 찾을 뿐 아니라 새로운 높이에서의 대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처지”라고 전제한 후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에 ‘페리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페리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 신문은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 복원을 목표로 관계국들과의 입장 조율”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 동떨어진 외교적 행보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조선이 핵억제력 강화노선으로 되돌아간 이상 이제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 ● “美 민간단체들 대북지원사업 활발” <RFA> (5/23)

-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23일 전했다. ‘월드비전’은 다음 달 3일부터 열흘간 방북해 최근 북한에 보낸 밀가루와 콩이 제대로 도착해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북한 당국과 사업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 단체의 빅터 슈 북한담당국장은 RFA와 전화통화에서 식량 지원분이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에 있는 라면 공장과 두유 공장에 보내질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황해북도 연탄군 도치리의 식수시설 개선 사업이 끝나면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북, 개성과 사리원에 있는 병원의 낡은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를 진행함. 이 단체는 방북 기간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비료 등의 선적분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고, 개성 결핵병원과 황주 결핵 요양소의 보수 작업이 마무리됐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 ‘머시 코’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문제에 관계없이 지난 몇년 간 지원한 과수원과 양어장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는 북한에 식량, 의료, 농업 분야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최근 음악과 영어 분야로도 활동 반경을 넓혔다고 RFA는 전했다.



● **美 “北, 도발적 행위 하지 말아야”(5/23)**

- 이언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켈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는 정보사항에 관련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여부에 대한 확인을 비켜갔으나,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혀 북한의 자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했음. 켈리 대변인은 장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투명하고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최상의 방법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일로 믿고 있다”며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켈리 대변인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열심히 뛰면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UNDP실무진 방북, 지원사업 재개 논의중(5/22)**

- 유엔개발계획(UNDP) 실무진 4명이 19일 방북, 2년째 중단된 대북 지원사업의 재개와 이를 위한 사무소 재설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UNDP의 스테판 듀자릭 대변인은 “현재 이들 4명이 평양의 임시사무소에서 머물며 북측 관계자들과 북한에서 재개하게 될 사업 내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 직원과 북측 직원의 채용도 이미 공고했다”고 밝혔음.
- 그는 평양의 UNDP 사무소는 내달 보수공사를 마치면 다시 문을 열지만 “UNDP의 대북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업 재개 시기는 실무진들이 가져온 북측과의 협의 결과를 다시 검토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음. UNDP 집행이사회는 지난 1월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북측의 자금 전용 의혹으로 지난 2007년 이후 2년 가까이 중단돼온 대북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었음.

● **<‘대테러 비협력국’ 북한 어떤 제약받나>(5/21)**

- 북한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테러 비협력국으로는 여전히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떤 제재를 받을지 관심임. 정부 당국자는 21일 “테러지원국은 자동으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며 테러지원국이 아니더라도 대테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비협력국으로 지정한다”고 말함.
-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방위물품 및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의 수출 또는 수출 허가가 금지됨. 이 당국자는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따른 제재가 아니더라도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군수품 수출 길은 막혀 있었다”고 말함.

- 북한은 작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을 정도로 각종 제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약하다는 분석임.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나 수출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음.
-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무기 이전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 다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여전히 대테러에 미온적인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는 상징적 효과는 있다는 평가임. 외교 소식통은 “대테러 비협조국 지정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약하지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테러에 있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 ● <키신저 “北도 설득못시키면 말이되나”>(5/21)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설득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이 실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함. 키신저 전 장관은 19일 폭스뉴스 ‘온 더 레코드’ 프로그램에 출연, 북핵 문제를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함께 충분한 압력을 행사해 북한과 같은 정도의 나라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국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나”고 반문함.
- 그는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천연 자원이 전혀 없고, 완전히 이웃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며 중요한 무역도 없는 나라(북한)를 우리가 다룰 수 없으면서 국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함.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특사 파견시 유력한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의 이날 발언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적 핵비확산 체제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을 한 직후 나온 것으로 눈길을 모았음.
-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과 우리, 그리고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강조한 뒤 구체적인 북핵 해법에 대해 “벌칙과 보상, 외교와 압력을 병행하는 방안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힘. 그는 이어 “당면 과제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란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북한은 자존을 얻기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알기는 정말 어렵다”고 말함. 이밖에 그는 북한에 대해 “정말 이상한 나라”라면서 GNP(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하면서 굶주림과 생필품 부족을 야기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함.



### ● 클린턴 “北 의무이행 않으면 지원없어”(5/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자신들의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단 한푼도 북한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함. 클린턴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 올해 10월부터 집행될 2010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에 대비해 9천800만달러의 대북 경제지원기금(ESF)을 국무부 예산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샘 브라운백 의원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뇌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자 “전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답함. 그는 “북한의 자발적인 6자회담 복귀 및 이미 동의한 자신들의 의무의 이행을 재개하지 않는 한 이 기금 중 단 한푼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이 돈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를 볼 때에 대비한 방어벽”이라고 설명함. 앞서 미 의회는 북한의 핵불능화 거부와 핵시설 재가동 등과 관련, 올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대북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음.

### ● 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올해도 지정(5/20)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난 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거듭 지정함.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만1천958호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됨.
- 올해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 외에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옴.
-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과는 별도로 매년 5월 관보를 통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비협력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 등이 금지됨.

### ● “오바마, 최근 대북특사 파견에 긍정 입장”(5/2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주장함. 시걸 국장은 “좋은 소식”이라며 “한 인사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 선거 운동 때 김정일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자신은) 제대로 준비가 안됐으나, 누군가를 거기에 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함.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한 인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 면담자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 만족하느냐”, “아니다”고 대화하면서 이러한 말을 나눴다고 설명함. 시걸 국장은 “한반도 상황이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미국의 고위급 특사가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특사 후보로 제시하고, 이들이 방북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해 미국의 대화 의지를 전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을 뉴욕에 보내 키신저 전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근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주장함. 시걸 국장은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2월 그와 함께 방북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 내부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오바마 “핵무기 위협 감소·제거 최우선”(5/2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핵무기 위협 감소와 궁극적인 제거를 주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라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지 솔츠, 헨리 키신저 등 역대 국무장관 등과 만나 핵비확산 문제를 논의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하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이(핵 비확산)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핵이 확산되는 세계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의 안보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핵 비확산 분야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때에 특히 맞다”고 말함. 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상황과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집단의 핵물질 입수 노력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주도적 핵비확산 추진 노력을 거듭 강조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일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면서 “NPT를 소생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와 협력해 핵무기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고 NPT체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 이와 함께 그는 “CTBT도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는 냉전의 위험한 유산”이라고 말면서 전세계를 비핵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음.



### ● <클린턴, 또 북한 무시?>(5/20)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워싱턴 D.C. 포린프레스클럽에서 첫 외신기자회견을 가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각국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이날 회견에서 예상과는 달리 또다시 '북한'의 '북'자도 언급되지 않았음. 클린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라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물론 중동지역의 평화, 이라크 문제를 거론함.
- 또 러시아·중국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 전통적 동맹 강화도 중요 이슈의 하나로 꼽았다. 북한과 비슷한 처지인 이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도 언급함. 그렇지만 정작 2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농축우라늄 개발을 시사하며 위기 지수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음. 모두발언에 이은 일문일답에서는 북한 문제가 화제에도 오르지 않았음.
- 지난 1월 인준청문회 당시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급성을 갖고 행동할 것이며, 시리아 등에 대한 북한의 핵기술 이전 의혹 등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던 클린턴 장관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상황임. 이미 이런 기류는 클린턴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가진 지난달 의회 청문회 때부터 읽혀짐.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렸던 당시 청문회에서 그가 준비했던 A4용지 10장 분량의 모두연설에서 북한은 단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음.
- 하지만 이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고조에 장단을 맞추며 춤을추기 보다 전략적인 무시에 나서고 있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음. 워싱턴의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기류가 대세를 이룬 분위기"라고 전함.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위협하는 북한이 모든 카드를 다 소진할 경우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이런 기류 형성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 적지 않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동조하고 있음.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문제를 뒤로 돌렸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기저기 역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함.

### ● 북·미 외교수장 7월 태국ARF서 첫 만남(5/19)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확인됨. 앗타웃 씨씨뭇 태국 외교부 아세안국 부국장은 이날 한



-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6월1~2일)를 앞두고 태국을 방문 중인 한국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측에서 박의춘 외무상이 7월 17-23일 ARF에 참석한다는 확답을 주었고 미국도 클린턴 국무장관의 참석을 확인했다”고 말함. 그는 박 외무상의 회의 참석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카시 피롬 외교장관이 방북할 계획이며 북한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미 ‘외교수장’이 국제무대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되며 단독 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됨.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RF에서 당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여 분간 양자회동했었음. 또 지난 해 열린 싱가포르 ARF에서는 북한의 박 외무상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참석했지만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음. 대신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동에서 두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만났음.
  - 앗타웃 부국장은 태국 국내 정세 불안으로 ARF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정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장소는 방콕에서 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함. 특히 지난 4월 파타야에서 예정된 아세안+3 회담이 시위대의 난입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미리 폭력이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앗타웃 부국장은 이번 ARF 의제와 관련 “가장 큰 의제는 보호주의 무역정책, 범죄, 마약 등 전반적인 지역문제 및 국제안보 문제를 포함한 비전성명(vision statement)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다음달 1~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양측 간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
- “美 對北정책 ‘페리 방식’ 복귀해야” <日 전문가> (5/19)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임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당근과 채찍을 효율적으로 구사했던 클린턴 행정부 방식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의 한 전문가가 19일 주장함.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일본 대사를 역임한 오카자키 히사히코 ‘오카자키 연구소’ 소장은 이날 월 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를 통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초기 요란한 대(對)북한 강경책을 구사하다 결국 종반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현상유지’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그쳤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차관보가 주도했던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책은 막판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에 ‘쉽사리 철회할 수 없는’ 상당수 양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함.
  - 오카자키 소장은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이 주도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황에 따라 경수로 건설과 인도적 식량지원을 향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었



다고 비교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의 정책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하며 보다 효과적인 이전의 정책들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이른바 ‘페리 보고서’ 작성시 클린턴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가졌던데 비해 힐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부시 행정부 임기말 주요 대북정책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소외시켰다면서 특히 일본은 총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통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비판함.

- 오카자키 소장은 기존의 6자회담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데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양자협의를 갖고 실질적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었던 만큼 나름대로 실패는 아니라고 평가함. 그러나 그는 미-북 대화 방식에 있어서는 핵 핵시설 사찰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페리 방식이 효과적이었던 만큼 다시 이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 오카자키 소장은 나아가 미국이 일본 및 한국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력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과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 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를 100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이 북한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포괄적인 대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 게이츠 “알카에다, 北WMD 입수할까 걱정”(5/19)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북한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함. 게이츠 장관은 17일 방영된 미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알-카에다와 같은 집단이 WMD를 입수하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할 것”이라면서 “이는 정말로 심각한 우려”라고 말함.
- 그는 ‘파키스탄 핵무기 같은 것(의 획득)을 말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반드시 파키스탄으로부터만 (WMD 입수가 걱정이) 아니다”면서 “북한으로부터도 (입수 걱정이) 있다”고 말함. 그는 “북한은 또 다른 우려”라고 거듭 강조함. 아프간을 방문할 당시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게이츠 장관은 또 아프간 정부군이 주도적으로 군사작전을 이끌기까지 최소 2~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 이와 함께 아프간 추가 파병을 거절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게이츠 장관은 “나토는 약 20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나토가 3만 2천명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항상 나를 혼란스럽고 절망하게 한다”고 말함.



● 美 “北, 여기자 면담허용 좋은 일”(5/19)

- 미국은 18일 북한이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과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간의 면담을 허용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억류중인 2명의 미국인 기자들을 스웨덴 대사가 면담토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확실히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함.
- 하지만 그는 북한이 면담을 허용한 것을 이번 사태 해결의 긍정적 신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그들(기자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신호로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는 이어 “그들이 풀려날 긍정적 신호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매우 조만간 풀려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켈리 대변인은 또 이번 면담이 3월 30일 이후 스웨덴 대사의 두 번째 여기자 면담임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함. 그는 “기자들의 신변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미국의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해외 미국민의 안전과 신변, 보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함. 그는 이번 면담의 시간이나 두 여기자의 현재 상태, 면담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함.
- 한편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 문제와의 연계성과 관련, “기자(문제)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여행과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힘.

다. 중·북 관계

● <中, 6자회담 위해 대북특사 보내나> (5/22)

- 중국이 5개월간 중단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대북특사 파견을 계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양제츠(楊潔지 <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전 일본 외상과 가레스 에번스 전 호주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평양당국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됨.
- 양제츠 외교부장은 북한 설득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발언은 대북 특사 파견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이에 앞서 양제츠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한 것으로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이 관측함. 북한은 지난 4월 유엔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한 것과 관련, 유엔의 사과가 없는 한 더 이상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박의춘 외무상은 약 한달 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들른 베이징에서 양 외교부장이



외의 고위인사들도 만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문제, 그리고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추측함.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7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과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한 것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시동이 걸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이달 초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장관급’의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베이징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 냉각기가 지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분석임. 중국은 대북 특사로 정식 외교부 라인보다는 당의 중앙대외연락부 채널을 고려하고 있고, 파견 시기는 오는 6월로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한 소식통이 전함. 이와 관련, 지난 1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던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이 대북 특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측의 성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미국측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함. 한편 중국은 일본이 6자회담에서 본 주제가 아닌 자국인 피랍 문제 등을 자꾸 거론해 북한 측을 자극함으로써 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내심 불만인 것으로 알려짐.

#### ● 박의춘 北 외무상 베이징서 평양행(5/19)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19일 약 한달 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음. 박 외무상은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오후 출발하는 고려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귀빈실로 향함.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박 외무상이 1박2일간의 베이징 체류 기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앞서 박 외무상은 지난달 25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해 출장 중이던 양제츠 부장 대신 왕광야(王光亞) 외교부 수석 부부장과 회동, 북·중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양제츠 부장이 현재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어 의전상의 요인과 북·중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박 외무상은 지난달 하순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참석을 위해 쿠바를 방문한 뒤 페루와 브라질을 거쳐 18일 베이징에 도착함.



## 라. 일·북 관계

### ● “북한, 북동부 해역 항해금지 발표” <日당국> (5/22)

-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金策市) 연안 약 130km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2일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발표한 항해정보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음.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연안 선박을 대상으로 발신한 항해 정보 수신을 통해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음.
- 경보 대상 시간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나 항해금지 지역을 설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나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음.

### ● “北헌법,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 명기”(5/22)

-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함. 이는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것으로, 김 위원장의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함.
-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있는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고 개정함.
- 김 위원장의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해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임. 신문은 이번의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과거의 국가주석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말함.

### ● 日, 대북 중고 탱크로리 수출업자 영장(5/19)

- 일본 효고(兵庫)현 경찰은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될 수 있어 북한 등에 수출을 금지한 대형 탱크로리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교토(京都)의 한 중고차판매회사 대표(5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함. 이 업자가 거래한 북한의 상사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돼 일본 경제산업성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조선백호7무역회사’라고 신문은 전함.



- 탱크로리는 강력한 엔진과 새시를 장착해 무게 10t 이상의 화물도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에서는 대포동 등 탄도미사일 운반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문에 따르면 이 업자는 지난해 1월 중개역인 중국 다롄(大連)의 무역회사를 통해 고베(神戸)항에서 중고 국산 탱크로리 2대를 한국의 운송회사에 수출하는 것 처럼 꾸며 북한의 조선백호7무역회사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 업자는 400만엔을 주고 중고 탱크로리 2대를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짐.

● “日납북자단체, 北에 팩스로 전단 발송” <RFA>(5/19)

-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일본인납북자단체인 ‘희망을 위한 납북자 구조센터 (ReACH)’가 팩스를 이용해 북한 평양에 전단을 보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센터는 지난해 말 일본의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입수한 평양의 대외 기관과 사업처의 팩스 번호 약 200여개를 전달받아 2월부터 일본과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해당 팩스 번호로 전단을 보내고 있음.
- 이 단체의 아사노 이즈미 대표는 “휴전선 인근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보고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간 연결된 전화선을 통해 팩스로 전단을 보내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말함. 그는 “팩스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해당 기관들이 자주 팩스 번호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단이 전달됐다고 추정한다”며 “전단을 팩스로 보낼 경우 북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양의 엘리트 계층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함.
- 한국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전단에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편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앞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함.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외국에서 팩스가 가능한 북한의 기관들은 주로 외교 기관이나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정보기관”이라며 “이들 기관에 전단을 보내는 일에 대해 북한 당국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美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공식 확인(5/22)



美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AP자료 사진. 2009.5.22

- 미국 국방부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우리 군은 국방예산 확보 문제와 고환율 등으로 고비용 무기의 전력화 시기를 늦출 방침임을 설명하고 2015~2016년께 최신형 글로벌호크를 구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미국은 이달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키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힘. 미국은 작년 SPI 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호크의 판매 가능성을 거론해왔지만 ‘판매를 결정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SPI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의 거둬진 판매 요청에 따라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특히 미측은 이른 시일 내에 글로벌호크 제안 요구서(LOR)를 전달해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에 사의를 표명하고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고환율에 따른 해외도입 단가 상승 등으로 고비용 무기의 전력화 시기를 순연할 계획이어서 글로벌호크 구매계획을 다소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군은 애초 2011년께 글로벌호크급 고고도 UAV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015~2016년으로 늦추기로 함. 미국 공군은 현재 블록20형의 글로벌호크를 실전배치했으며, 제작사인 미국 노드롭 그루먼사



는 2012년까지 최신형의 블록30형 26대를, 2015년까지 블록40형 15대를 각각 생산할 계획이어서 블록30형을 우리 군에 판매할 가능성이 큼. 글로벌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임.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 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천km, 대당 가격은 4천5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 柳외교 “한·미정상회담 통해 전략동맹 심화”(5/21)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림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내달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후 양국 간 처음있는 정상방문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양국 간의 신뢰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유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위기 극복,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협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진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학계, 재계 인사들과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간 우의와 협력의 저변을 더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함.
- 유 장관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경고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자 접촉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유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개성공단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함.

### ● 오바마 “한·미FTA, 양국 번영 강화·증진”(5/21)

-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이 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범세계적 문제에도 초점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사관



측은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당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은 것임. 한 대사는 이날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 유지, 한·미 FTA를 포함한 자유무역의 확대, 인적·문화적 유대 관계 강화 등을 위해 양국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함.
- 한 대사는 또 한·미 관계가 다층적이며 다차원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달 16일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미대사관 측은 설명함.

#### ● <李대통령-클린턴, ‘녹색성장’ 공감>(5/19)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고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북정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때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가들의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비슷한데 1인당 배출량은 중국이 훨씬 적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말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던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기후변화에 적극 앞장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며 “미국이 앞장섰기 때문에 세계 기후변화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함. 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저와 앨 고어 전 부통령이 주도한 교토의정서가 실패한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중국이나 인도는 탄소배출을 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그러나 지난 10년간 세계의 의식은 많이 변했다”고 말함. 그는 또 “10년 전에는 미국 민주당도 (탄소배출량 규제보다) 경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이 바뀌었고, 존 매케인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함.
- 특히 그는 “기후변화는 중국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은 거대한 인프라 사업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런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라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중국측에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에 언급, “오바마 행정부는 방위력이 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 손을 벌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되 강한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로버트 게이츠를 각각 국무,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만 봐도 이런 철학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면서 “남북문제를 포함한 국제문제에 한·미 양국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 한·미, 6.25전사자 유해 공동발굴(5/19)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한 달 일정으로 강원과 경기 일대에서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공동 작업에 나섬. 지난 14일 시작된 이번 공동 발굴작업에는 한국에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요원과 장병이, 미국에서는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미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양국의 공동 작업은 2006년 서울 성산대교 남단 등 4곳에서 처음 이뤄졌지만 당시는 양국 간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이라 협력에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작년 8월 MOU 체결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공동 발굴작업이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 하에 이뤄지는 사실상의 첫 공동발굴로 볼 수 있음. 지금까지 양국 간 공동발굴작업으로 미군 유해가 발견된 적은 없어 한·미 양국은 이번 발굴작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제보를 바탕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유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에 미군 유해를 발견하면 양국 간 공동발굴작업을 통한 첫 미군 유해발굴이란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말함. 이번 발굴 대상지는 강원 화천과 양구, 철원, 경기 연천 등 4곳으로, 순차적으로 발굴작업이 진행됨.
- 그 첫 발굴지로 현재 작업이 한창인 화천 지역은 1951년 6월 국군과 유엔군이 1.4후퇴 이후 재북진을 시작하면서 미 제9군단 예하 7사단과 24사단이 김화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곳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임. 이번 유해발굴을 위해 JPAC에서는 법의학 인류학자와 분석 및 의료담당, 법의학 사진담당 등 12명의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국방부도 유해발굴감식단 전문 요원과 장병 등 26명을 참여시키고 있음.

#### 나. 한·중 관계

##### ● 한·중 녹색경제포럼 26일 개최(5/18)

- 한국과 중국이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한·중 녹색경제포럼’이 오는 26일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됨.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중 양국의 에너지, 발전, 석유·가스, 신재생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의 공무원과 기업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8일 밝힘.



- 이번 행사는 중국 과학기술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한국의 지식경제부, 주중대사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후원함. 이 회의는 한·중간 녹색산업 협력을 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업계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한·중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신시장 창출 지원,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한상의는 무역촉진위원회와 그린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도 협의하고 있음.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전략을 선언한 뒤 중국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음. 중국은 최근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시사주간지 요망(瞭望)에서 “한국의 녹색성장계획이 중국에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특집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환경분야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주중대사관은 한국의 (주)제이텍이 중국 업체와 20억원 상당의 미세면지 저감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나노케미칼도 중국 업체와 1천140만달러 상당의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다. 한·일 관계

##### ● 韓·日 총리회담..北핵 대응 공조키로(5/22)

- 일본을 방문 중인 한승수 총리는 22일 오전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확산을 막고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한 총리는 회담에서 “신종플루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한·중·일간 공동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고 아소 총리도 이에 동감을 표명했다고 김왕기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함.
- 이와 관련, 교도(共同)통신은 한 총리와 아소 총리가 신종플루 대책 마련을 위해 양국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전문협의회 방안은 한 총리가 제안했고 아소 총리도 “중국을 포함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중·일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양국 총리는 경제협력과 관련,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한 총리는 부품·소재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를 희망했고, 아소 총리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열린 부품소재 조달 공급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에 만족을 표명함.
-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북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인내심을 갖고 공조해 나가자”고 했고, 아



소 총리는 “서두르지 않고 5개국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교도통신은 양국 총리가 북한이 불참을 선언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으며 한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 재실시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핵 문제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또 한 총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대한항공 폭파범인 김현희씨와의 추가 면담과 관련, “인권문제가 최우선이다. 앞으로도 요청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이 통신이 전함.

#### 라. 미·중 관계

##### ● 中 ‘美에 태평양 양분 제의설’ 일축(5/21)

- 중국은 21일 자국이 동태평양을 관장하고 미국이 서태평양에 집중하자고 제의했다는 인도 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일축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인도의 타임스가 티핑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관의 인도방문을 맞아 지난 15일이같이 보도한 데 대한 논평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함.
- 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평화적 발전 노선을 지키는 원칙이 확고부동하고 독립적인 평화 정책과 방어성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또 중국은 국제와 지역 안정 유지에 믿을만한 세력으로 존재해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미국·인도등 관련 당사국들이 그 같이 무책임한 보도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 ● <美, 중국과 ‘G2 구상’ 논란>(5/19)

- ‘중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 동맹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중국과 연례적으로 G2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논란이 뜨겁음.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G2 구상’을 처음 제안한 인물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로, 그는 지난 1월 베이징 연설에서 선진 8개국(G8)과 별도로 G2 회담을 열어 중국과 경제위기, 북핵 등 국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브레진스키는 당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포괄적 동반자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역설함.
- 이 제안에 대해 세계은행의 로버트 줄릭 총재와 저스틴 이푸 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공동 칼럼에서 G2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G20)에 추진력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경기회복은 G2에 달렸다. 강력한 G2가 없다면 G20은 실망할 것”이라고 환영함.
- 그러나 G2 구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지난 1월까지



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테니스 와일더는 미국이 G2에 참여할 경우 일본, 호주 등 동아시아의 우방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함. 와일더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시아라는 보다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며 중국과 관계가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 기존 동맹국과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의 데릭 시저스 연구원도 양국이 무역 및 투자분야 갈등으로 더욱 소원해지고 있고, 협력적인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면서 “워싱턴과 베이징은 많은 실질적인 이득을 얻으려 정략결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시저스 연구원은 이런 관계가 좋은 시절에는 유지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잘못을 상대에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효율적인 G2를 출범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함. 미 외교협회(CFR) 엘리자베스 이코노미와 애덤 시걸 선임연구원 역시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2009년 5.6월호)’ 기고문에서 “효과적인 미-중 협력에 주요 장애물은 주권과 제재, 무력 사용에 대한 극명한 관점의 차이”라며 G2 구상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 ● 中 정부도 美대사 지명자에 기대감(5/18)

- 중국 정부가 ‘중국통’인 존 헨츠먼(49) 주중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음.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중국 외교부에 신임 주중 미국대사의 지명 소식에 관한 입장을 요청한 결과 “중국은 차기 대사가 양국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함.
- 헨츠먼 지명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지만 아직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가 이처럼 큰 기대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짐. 헨츠먼 내정자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은 17일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서도 쉽게 드러난 바 있음.
-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17일 헨츠먼이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고 중국인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될 만큼 거물급 인사란 사실을 부각시키며 중·미 관계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함.

#### 마. 미·일 관계

##### ● “美, 주일대사에 IT 변호사 존 루스 내정”(5/20)

- 미국 정부는 공석중인 주일 미국대사에 실리컨밸리에서 IT(정보기술)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공헌한 존 루스(54)를 내정,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함. 그동안 주일 대사로 유력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종 조율 단계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루스 변호사에게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함.

- 백악관은 조만간 일본 정부의 답변을 들은 후 루스 내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루스는 상원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됨. 루스는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변호사사무소에 들어가 현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맡고 있음. 전문분야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관련법, 기업지배 등인 것으로 알려짐. 루스 내정자는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부터 자택에서 자금모금 파티를 개최하는 등 일찍부터 지지에 나섰으며,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8월 오바마 진영의 “최대 자금 조달자의 한사람”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신문은 전함. 일본과는 별다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 미국인 80%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우방”(5/19)

- 일본 외무성이 미국에서 실시한 대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80%가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우방”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함.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함. 특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91%에 달함.
- 또한 미·일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도 73%로 10%포인트가 높아졌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을 꼽은 비율도 46%로 3%포인트 상승함. 중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꼽은 비율도 39%로 5%포인트가 올랐음. 조사는 1960년 이후 해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2-3월 18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갤럽사가 전화 조사함.

#### 바. 미·러 관계

#### ● “美-러 정상회담 모든 문제 해결 못 해”(5/22)

- 러시아는 오는 7월 예정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양국 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산적한 모든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상회담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함.
- 그는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며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등 구체적 의제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이번 회담에서는 군축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중동평화, 양자 경제·통상 협력 분야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6~8일 모스크바를 방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임.

### ● 美-러, 전략무기 감축협상 시작(5/19)

- 미국과 러시아가 올해 12월5일 시한이 마감되는 전략무기 감축협정 (START-1)의 후속협정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감. 양국은 로즈 고테필러 미국 국무부 검증·군축 차관보와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외무부 안보군축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9일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건물에서 1차 본협상에 들어감.
- 지난 4월 프라하 연설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천명한 바와 같이 핵무기 감축을 위한 미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황 이어서 전 세계가 이번 회담에 주목하고 있음. 이번 군축 논의는 냉 전시기에 대립하던 양국이 앞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되리란 전망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성과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하며 러시아 는 상호 ‘수용할만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양국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감축 대상 무기와 숫자, 그 시기, 통제 메커니즘 등을 협의할 예정임. 양국은 2002년 ‘전략공격 무기감축협정(SORT)’에 명시된 핵무기 수(1천700~2천200개) 보 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자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핵탄두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 등의 발사 수단(운반로켓)도 감축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는 핵탄두와 발사 수단 모두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임.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1일 현재 러시아는 3천909개의 핵 탄두와 814개의 각종 발사 수단을, 미국은 5천576개의 핵탄두와 1천 198개의 발사 수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특히 모스크바 타임스 등 러시아 언론들은 이런 기술적 문제 외에 러시아가 동유럽 미사 일(MD) 문제를 이번 협상과 연계한다면 이번 협상이 순조롭지 않 을 수도 있다고 전함.
-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지난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 협정은 절대 미국의 MD 계획과 연계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러시아는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MD 시설을 세우려는 것이 자국 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MD 계획을 포기하 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임차해 운영 중인 기지를 공동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양국 모두 시효 만료 전 성과물을 낸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지 만, 이견이 크면 예상보다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게 관측통들 의 분석임. 양국은 일단 오는 7월6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이전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임.



## 사. 기타

### ● 柳외교, 아셈회의 참석차 출국(5/2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9차 아셈(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오후 출국했음.
-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16개국과 아세안 사무국,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EU 집행위 등 총 45개 회원국 외교장관 또는 대표가 참석함.
- 아셈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금융·경제위기 및 범세계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십 강화’라는 주제하에 금융 및 경제협력 강화, 기후변화, 전염병, 비확산, 문화 및 문명간 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의 결과는 ‘의장성명’으로 정리돼 폐회 직전 채택될 예정임.
-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 정치·경제의 3대축(아시아, 유럽, 북미)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지역간 협력체인 아셈은 우리의 아시아와 유럽 외교를 강화하는 유용한 다자외교 기반”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아셈 회원국들의 지지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특히 유 장관은 아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25일 주최국인 베트남은 물론 일본 등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양자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 노력도 경주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음.

### ● 韓中日, 과학기술협력체계 구축 합의(5/24)

-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만강(万鋼)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시오노야 류(鹽谷立)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참석,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집중 협의했음.
- 3개국 장관들이 이날 회의에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한중일 과학기술협력 방식을 구축하는 데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임. 특히 이번 회의에서 3개국은 전 지구적 이슈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해 감염성 질병, 물, 자연재난,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구 시설 활용과 인력 교류를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또 안 장관은 융합녹색기술 개발과 관련한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했음. 아울러 3개국은 ‘청년 과학자’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3국간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부터 ‘청년 과학자 워크숍’을 교대로 개최기로 합의했음.



- 3개국은 이와 함께 과학문화활동, 청소년과학활동, 과학교육활동 등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 한·EU 정상 ‘FTA 조기타결’ 합의(5/23)

-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기후변화 대응, 북핵 문제 등 양측 현안을 논의했음. 한·EU 정상회담은 그동안 2년마다 열리는 아셈(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돼 왔으며 상대국에서 갖기는 이번이 처음임. 이날 회담에서 양측 정상들은 최근 한·EU FTA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뒤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양측 경제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음.
- 특히 지난 1996년 체결한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 협상과 함께 한·EU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EU 관계 강화 및 격상을 위한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음. 양측 정상들은 아울러 이 같은 협정을 바탕으로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기존 경제·통상 위주 협력에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분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음.
-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EU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EU FTA가 조속히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음. 이날 회담에서 정상들은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공감하는 한편 최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했음. 이밖에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보호주의 배척, 온실가스 감축, 유엔 제도 개혁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 캄보디아서 17차 아세안-EU장관회의(5/22)

- 제17차 아세안-유럽연합(EU)장관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들 동안 캄보디아에서 개최된다고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이 22일 보도함. 이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EU 27개 회원국들의 외무장관 등 수백명이 참석한다고 통신은 전함.
-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국경 범죄, 무기 관리, 마약 밀매,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의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 남홍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EU 의장 겸임)이 공동의장을 맡게 됨.



● <오바마 외교정책 핵심참모 10인>(5/22)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좌지우지하는 핵심 인물로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4명이 꼽힘. 그렇다면, 이들을 도와 미국 외교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모들은 누구일까.
-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이 21일 오바마 시대의 외교정책을 막후에서 주도하고 있는 행정부 관리 10명을 꼽아 눈길을 끌.
  - ◇ 토머스 도널런 =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국가안보회의(NSC)의 '차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부처 간 조정기능을 수행함. 그의 동료들은 "외교정책에 관한 한 도널런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함.
  - ◇ 제임스 스타인버그 =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국무부 부장관으로 부처 간 의견 조정에 탁월한 능력이 있음. 국무부 소식통들은 그가 부처 간 국가안보 정책을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백악관에서 업무시간의 절반을 보낸다고 전함.
  - ◇ 미셸 플로노이 = 국방부의 서열 3위인 정책담당 차관. 많은 소식통은 플로노이가 국방부의 민간인 대표로서 NSC 차관급회의에 참석하는 사실상 국방부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함.
  - ◇ 앤서니 블링컨 = 상원외교위 수석위원 출신으로 바이든 부통령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은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임. 부통령실을 대표해 NSC 차관급회의에 참석함. 오바마 정부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외교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블링컨은 바이든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음.
  - ◇ 마크 리퍼트 =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외교 보좌관을 지냈고 현재 NSC 비서실장으로 200명이 넘는 NSC 참모들을 관리하면서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데니스 맥도너 = 톰 대술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하다 리퍼트에 의해 지난해 시카고 오바마 선거캠프의 외교정책 보좌관으로 천거됨. 현재 NSC 전략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리퍼트와 함께 여러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 외교참모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음.
  - ◇ 리처드 홀브룩 = 미국 아프간·파키스탄 특사로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보하는 행정부 인사 20여명에 속함. 현재 미국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외교과제를 맡고 있는 셈임.
  - ◇ 윌리엄 번스 = 국무부 정치담당 차관으로 이란 문제와 관련된 다자협상에서 미국 대표로 나서고 있음.



### ● 한-방글라데시, 정책협의회 개최(5/21)

-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 통상부가 22일 밝혔다. 이용준 차관보와 토히드 후세인 방글라데시 외교차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정부 고위인사 및 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특히 양측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자원·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 밖에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외교부 차관보급 혹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키로 함. 또 후세인 차관은 회의에서 유·무상 원조를 통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고 이 차관보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방글라데시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함.

### ● 러시아-EU 정상회의 개막(5/21)

- 러시아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로프스키에서 개막함. 이날 저녁 비공식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EU 순회 의장국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가 참석함.
- 특히 22일 본회담에서는 지난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분쟁을 계기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 문제, 그루지야 사태를 둘러싼 안보 현안, 담보 상태에 머문 ‘동반자 협정’ 재개 문제, 그리고 금융 위기 공동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짐. 이날 만찬에 앞서 솔라나 대표는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그루지야 전쟁으로 EU와 러시아의 관계가 시련에 처해 있고 여러 문제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한 건설적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지난 1월 가스 위기를 계기로 EU 소비국들은 매년 반복되는 사태를 피하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더욱 강하고 정교한 틀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행 가스의 80%를 공급하는 러시아는 지난 1월 가스 채무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 공급을 중단, EU 소속 10여 개 국가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고 이후 EU는 안정적 가스 수급 방안을 강구중임.
- 솔라나 대표는 또 “EU는 유럽 안보 향상을 위해서라면 공개적이며 건설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군축, 비확산, 기후변화, 테러 등도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힘.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의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대외정책 보좌관은 “러시아는 EU와 어떤 대립도 원하지 않으며 그루지야 사태 등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

### ● 베트남, ODA사업 새 입찰제도 마련(5/21)

- 베트남 정부가 일본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입찰 제도를 발표함. 베트남 일간신문 탕니엔(청년)은 21일 계획투자부(MPI) 소식통을 인용해 ODA를 둘러싼 수의계약, 공금 유용 등 여러 가지 스캔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입찰 시 제3자가 진행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제3자 입찰 감시제도’를 마련했다고 보도함. 이 제도에 참가하는 감시원들은 MPI 산하 입찰관리국(BMB)의 공무원들이나 현행 입찰법이 규정한 유자격 개인이나 조직들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 감시원들은 자문과 건설공사를 위한 입찰서류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을 하게 됨. 또 투자자들은 입찰 전문신문과 관련 웹사이트에 게재될 수 있도록 감시원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에 따라 1억엔 이상인 자문과 10억엔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투자자들은 반드시 신원, 국가, 계약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탕니엔은 덧붙였다.
- 앞서 일본은 지난해 남부 호찌민에 위치한 한 일본 컨설팅업체 ‘퍼시픽 컨설팅츠 인터내셔널’이 호찌민시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ODA자금으로 건설되는 도로공사를 일본 업체에 수주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한 뒤, 관련자 3명을 구속함. 일본 정부는 이후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련자 색출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함. 그러나 베트남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은 ODA 제공 중단을 발표했으며, 결국 베트남 정부가 올 1월 뇌물 수수 혐의자 2명을 구속한 이후 ODA 재공급 가능성을 시사함. 한편 지난 1992년부터 일본은 베트남에 모두 150억달러 규모의 ODA를 제공, 주로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해옴.

### ● 원자바오 “EU에 상품구매단 추가 파견”(5/21)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0일 중국이 조만간 유럽연합(EU)에 상품구매단을 추가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함. 원 총리는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중-EU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EU에 파견한 상품구매단이 적극적인 효과를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함.
- 원 총리는 “중국은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에 맞서 EU와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며 과학과 교통, 우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그는 이어 “EU가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 규제를 완화해 중국과 EU 간의 무역을 늘려 나가고 쌍방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의 잠재력을 키워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말함. 그는 또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한편 원 총리는 지난 1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번에 유럽 방문 길에 오른 것을 ‘성의를 여행(誠意之旅)’이라고 표현함. 그는 “나는 성의를 갖고 이곳에 왔으며 책임과 믿음을 갖고 왔다”면서 “이는 마음 속의 대화이며 또한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말함.

#### ● 中, 대만에 상품구매단 세차례 파견(5/21)

-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대만에 상품구매단을 세차례 파견함.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중국 양안경제무역촉진단이 5월 말과 6월 중순, 7월 초순 대만으로 가 시장조사와 계약체결 활동을 한다고 밝힘. 야오 대변인은 “상무부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공업정보부 등 3개 부처가 최근 중국 기업들을 모아 대만상품구매단을 조직했다”고 설명함. 그는 상품구매단의 규모와 구매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통수공예품, 가공식품, 일용품, 기계장비, 원자재 등을 구입할 것이라고 말함.
- 리수이린(李水林) 중국 해협양안경제무역교류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상품구매단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만에 머무르며 가전제품과 경공업제품, 식품가공물을 매입할 예정임. 야오 대변인은 “대만으로 가는 중국 기업들은 자체 수요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만 상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함.

#### ● <印, 스리랑카서 中 견제 꺾걸음>(5/20)

- 스리랑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온 인도가 내전 종식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섬.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시브 샨카르 메논 외무차관과 M.K. 나라야난 국가안보조좌관을 스리랑카로 보내, 마힌다 라자팍세 대통령을 면담하고 전후 난민처리 방안 등을 논의토록 할 예정임. 인도는 이 자리에서 난민 구호를 위해 5천 가구의 쉼터 건설을 위한 자재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을 약속할 예정임.
- 국제사회가 휴전을 거부한 채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양산한 스리랑카의 전쟁범죄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종전 선언 이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동안 스리랑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임. 중국은 스리랑카 남쪽 끝에 있는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10억달러를 지원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통로를 확보함. 또 중국은 인도가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스리랑카에 공격용 무기 공급을 중단하자 전투기와 방공포, 영공 감시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해 스리랑카 정부군의 내전 승리를 적극 도왔음.



- 인도는 이처럼 스리랑카에서 거침없이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의 존재를 우려했지만, 스리랑카 정부를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사회와 자국내 타밀족의 반발을 우려 때문에 속만 태웠음. 팔라니아 판 치담바람 인도 내무장관은 최근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격랑의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이는 (스리랑카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에 던져진 하나의 불협화음”이라며 중국의 내전 지원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함.
- 이런 가운데 내전이 마무리되고 수십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인도에는 인도주의적 명분의 지원을 통한 상황반전의 계기가 생긴 셈임. 이에 따라 인도는 난민 지원 이외에도 전후 스리랑카 정부의 타밀족 처리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등 자체적인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임.

#### ● 닝푸쿠이 “국토의 1mm도 지키겠다”(5/20)

- “5만분의 1 지도에서의 1mm는 실제로는 50m나 된다. 이 1mm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매달리겠다”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과 협상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신설한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 사장(국장)을 맡은 닝푸쿠이(寧賦魁) 사장은 19일자 베이징만보(北京晚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울타리를 견고히 지키겠다는 각오를 이같이 밝힘.
- 주한 대사를 지낸 한반도통인 닝푸쿠이 사장은 “국경선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관은 정치적인 입장이 확고부동하고, 업무에 임해서는 더욱 잘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근무 자세는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함. 닝 사장은 중국이 육지로는 14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이중 12개국과 국경선 획정을 마쳤고 나머지 2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함.
- 해양에서는 지난 2000년 베트남과 베이부만(北部灣·통킹만)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과 해양개발 또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다고 닝 사장은 밝힘. 닝 사장은 그러나 인접국들과 해양의 섬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닝 사장은 이웃 국가와 국경선을 확정하고 담판·협상하기 위해선 길도 없는 오지를 탐사·측정해야 하고 마라톤 회담도 불사해야 하는 등 엄청난 체력과 정신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함.

#### ● 한·아세안, 내달 1-2일 특별 정상회의(5/20)

-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및 국제적 현안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다음 달 1~2일 제주도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2000년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 및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행사임.

- 외교통상부는 20일 “정부는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고 한·아세안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힘.
-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함. 아세안은 중국과 유럽 연합(EU)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대상이자 2대 해외투자 대상이며 2대 해외 건설시장으로 국제무대에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상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등 글로벌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공동의 번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新)아시아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임.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는 우리의 이웃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번영과 협력 관계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이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함. 회의 첫날인 6월 1일 이 대통령과 10개국 정상들은 지난 20년간의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아세안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 발전방향 등을 토의한 뒤 환영만찬 및 문화공연을 통해 우의를 다짐. 회의 둘째날엔 11개국 정상들이 국제금융위기,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특별정상회의 전날인 5월3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CEO 정상회의’는 정부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가,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됨. 이번 회의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브루나이의 하지 하사날 볼키아 국왕,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라오스의 부아손 부파반 총리, 말레이시아의 나집 툰 라작 총리, 미얀마의 떼인 세인 총리,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 태국의 아피시트 웨차치와 총리, 베트남의 응웬 쩐 중 총리, 아세안 사무국의 수린 핏수완 사무총장 등이 참가함.

● 中, 페트로브라스에 100억달러 투자(5/20)

-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19일 중국 국가개발은행(CDB)과 100억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페트로브라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향후 10년간 CDB로부터 10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석유화학(시노펙)에 하루평균 20만배럴의 석유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말함. CDB의 투자 및 페트로브라스의 석유 판매 합의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에 맞춰 체결된 13개 계약 가운데 하나임.

- 앞서 지난 2월 중순 브라질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룰라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CDB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세계 2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석유 공급량 확보를 위해 브라질산 석유 수입을 서두르고 있음. 브라질은 심해유전이 개발될 경우 석유 매장량이 지난 2007년 말 기준 126억 배럴에서 최소한 500억 배럴로 늘어나 세계 1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1일 대서양 연안 산토스만에 위치한 투피(Tupi) 심해유전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생산하는데 성공함. 투피 유전은 산토스만 일대 10여개 심해유전 광구 가운데 첫 번째로 개발됐으며, 향후 15개월로 예정된 시험생산 기간 하루평균 1만4천~1만5천 배럴의 석유가 생산될 예정임. 이에 따라 CDB의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은 브라질 대서양 연안의 심해유전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CDB는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투자 외에도 브라질 국책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8억달러, 시중은행인 방코 이타우(Banco Itau)에 1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다른 국책은행인 방코 도 브라질(BB)과도 별도의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 베트남, 中과 공동운영 사이트 폐쇄(5/19)

- 남중국해 파라셀(西沙)군도와 스프래틀리(南沙)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중국 간에 외교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중국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함.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라오동(노동)은 19일 베트남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개설한 뒤, 그동안 양국 무역부가 공동으로 운영해온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보도함.
- 이번 조치는 중국 무역부가 최근 파라셀 군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베트남 측 주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뤄짐. 라오동은 지난 18일자 논평에서 중국의 이런 태도는 “사실과 다른데다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함. 이와 관련해 베트남 무역부의 전 후 링은 인터넷 사이트 폐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베트남 주재 중국대사관 측도 언급



을 거부함.

-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18일 레 중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외국인들이 벌이는 모든 행위는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두 곳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함. 성명은 베트남의 영유권 하에 있는 곳들을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중국 정부가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은 명백히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중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77일 동안 두 군도에서의 어로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함. 중국은 또 이날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두 군도에 광둥(廣東)성 최대 어업지도선인 '위정(漁政)44183'호를 파견함. 이 어업지도선은 조만간 하이난(海南)성 쓰야(三亞)항에서 위정44061호와 합류해 파라셀군도로 항해한 후, 그곳에서 15일 동안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감시한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 룰라 訪中..새 국제질서 협의(5/19)

- 중국을 방문중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 새로운 국제 정치와 경제질서를 모색할 것이라고 당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8일 외신 등을 인용·보도함. 룰라 대통령은 1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의 연쇄 회동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간 무역거래때 달러화 사용을 억제하고 각각의 화폐인 런민비(人民幣)와 헤알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러시아, 인도와 함께 브릭스(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과 브라질이 양국간 무역에서 달러화 대신 양국의 화폐로 결제하는 데 합의하면 이는 기존의 세계 경제·금융질서에 도전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은 작년부터 무역 결제대금으로 달러화 사용을 중지하고 서로의 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옴. 중국은 또 지난 4월초 런던에서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달러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고 제의했고, 브라질은 중국에 무역때 서로의 화폐로 결제하자고 제의함.
- 한편 룰라 대통령은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한 유엔개혁 문제와 함께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룰라 대통령은 또 이번 방중기간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석유화학으로부터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사업에 100억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비롯해 석유, 항공, 광산, 농업 부문에서 많은 협정을 체결함.



### ● <미얀마 제재 효과 중국·인도에 달려>(5/19)

- 유럽연합(EU)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얀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인도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종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음.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얀마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웃 나라 중국과 인도가 미얀마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와 EU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얀 코후트 외무장관이 미얀마에 대한 EU 차원의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베니타 페레로-왈트너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시각차를 보임. EU는 1996년부터 미얀마에 여행 금지와 미얀마 지도층과 그 가족의 자산동결, 무기수출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가해오고 있음.
- 왈트너 집행위원은 제재 대신 EU가 중국, 인도 등 미얀마의 이웃 나라들과의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스웨덴의 칼 빌트 외무장관 역시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거라면서 미얀마 주변국과의 대화 사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함. 그는 “미얀마와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미얀마에 영향력이 있는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함. 빌트 장관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았음.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나아가 중국을 특정하며 “EU가 특히 중국과 대화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나 EU 외무장관들 상당수의 바람대로 중국과 인도 정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구금 및 기소 사태에 대해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지는 아직 불투명함. 다만, EU와 중국은 오는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제11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 EU의 외무장관들이 이를 의식해 미얀마 사태를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사전 포석을 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함.
- 앞서 미얀마 군정은 18일 수치 여사의 공판을 참관하려는 4개 유럽 국가의 미얀마 주재 대사들의 법정출입을 막는 등 자국의 EU의 외교적 움직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표출하기도 함. EU가 중국과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얀마가 EU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EU가 제재를 선불리 강화하는 것은 자칫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더구나 EU 차원의 미얀마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미얀마 군부를 길들이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도 깔려있음.



- 수치 여사는 자택에 미국인 남성이 잠입한 사건과 관련, 가택연금 규정 위반으로 두 하녀와 함께 구금됐으며 18일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인세인 감옥에서 첫 공판이 열림. 공판은 19일 오전(현지 시각) 재개돼 수치 여사가 진술할 예정이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 될 경우 수치 여사는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됨.

### ● 방중 롤라 “中은 유전개발의 동반자”(5/18)

- 루이스 이나시오 롤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18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함. 롤라 대통령은 이날 240여명의 재계 인사들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중국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함.
- 롤라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1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연쇄 회동함. 그는 방중 직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역 확대, 과학협력, 국제문제 조율 등 3대 분야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겠다고 말함. 롤라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석유화학으로부터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사업에 100억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서에 서명함. 그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이나 유전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은 우리의 협력 동반자”라고 말함.
- 롤라 대통령은 또 “이번에 수많은 협정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브라질은 교역액이 30억달러를 넘는 등 거대한 무역 동반자”라고 말함. 중국은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은 거대한 중국시장에 육류 등 농산물 수출을 타진하고 있음.
- 중국과 브라질은 또 양국 무역대금 결제에 미국 달러화를 쓰지 않기로 하는 등 달러화의 기축통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창출 문제도 논의할 예정임. 롤라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한 유엔개혁 문제와 함께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지난 3월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산 제품의 1위 수출 대상국으로 떠올랐음. 브라질은 주로 철광석과 콩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 아셈 외교장관회의 25일 베트남서 개최(5/1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힘. 오는 25, 26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아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및 범세계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십 강화’라는 주제하에 금



용 및 경제협력 강화, 기후변화, 전염병, 비확산, 문화 및 문명간 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함.

● 베트남, 西沙·南沙군도 영유권 재확인(5/18)

- 베트남 정부는 18일 남중국해 파라셀(西沙)군도와 스프래틀리(南沙)군도에서 외국인들이 벌이는 모든 행위는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두 곳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함. 이날 레 중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베트남의 영유권 하에 있는 곳들을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중국 정부가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은 명백히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베트남 유력 일간신문 탕니엔(청년)이 보도함.
- 중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77일 동안 두 군도에서의 어로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함. 중 대변인은 베트남이 두 군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해당국들은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유엔의 해양협약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중국 농업부남해구위정국 귀진푸(郭錦富) 부국장은 사샤군도에서 외국 선적의 어선들이 폭약, 독약 등을 사용해 불법 어로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시설물을 절도하거나 파괴하며, 불법 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파견했다고 주장함. 귀 부국장은 외국 어선의 국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베트남 어선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은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6일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7일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 [참고 1] &lt;표&gt;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요일정(연합뉴스, 5/20)

날짜	장소	주요 일정
5월 30일	서울	-베트남 총리 접견. 오찬 -한·필리핀 정상회담. 만찬
5월 31일	제주도	-CEO 서미트 -한·태국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 사무총장 접견 -한·아세안 오케스트라 공연
6월 1일	제주도	-한·라오스 정상회담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1 -환영만찬 및 문화공연
6월 2일	제주도	-녹색성장 전시관 관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2 -공동서명 서명식 -정상오찬 -공동기자회견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한·미얀마 정상회담
6월 3일	서울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만찬
6월 4일	서울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만찬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5/20/0503000000AKR2009052013830001.HTML



[참고 2]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가국>-1(태국)(5/22)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방콕, 푸껫, 파타야, 치앙마이...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와도 접하고 있다. 면적은 51만4천여km<sup>2</sup>로 한반도의 2.3배, 남한의 5배에 달한다. 인구는 6천300여만 명이다. 95%의 국민이 불교를 믿는 등 말 그대로 불교국가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기준 4천73달러로, 1만9천231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가원수는 국왕이지만 국가운영은 총리가 한다. 태국(Thailand)이라는 국가명은 ‘자유의 땅’(Land of Freedom)이란 의미다. 그래서인지 국명에 어울리게 지금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1941년 대(對)영국 전쟁을 치르려는 일본군에게 주둔을 허용했다가 2차대전에서 연합국이 이기자 친일파를 제거하고 영국에 손해배상을 하는 등 ‘전향’했다. 미국의 도움으로 유엔에 가입한 뒤 6.25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국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1만5천708명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136명이 전사했다. 경기 포천군 운천리에 태국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및 평화공존관계 강화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단결과 협력 등을 외교노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단체와 반(反)탁신 진영의 충돌로 수년째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정정(政情)이 불안하다.

지난달 파타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도 반정부 시위로 무산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에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야 했다. 이런 만성 정치불안과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4년 쓰나미, 2006년 군부쿠데타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매년 5% 안팎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5/19/0503000000AKR20090519186500043.HTML



### [참고 3]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가국>-2(인도네시아)(연합뉴스, 5/22)

세계 최대의 섬나라이자 2억3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1만7천5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진 군도국가다. 아시아대륙 남동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 인도양과 태평양이 접하는 해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군인 말레이제도(諸島)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구 이리안자야) 등 5개의 큰 섬으로 나뉜다.

전체 면적은 한반도의 약 9배 크기인 190만km<sup>2</sup>로 서쪽 끝인 수마트라섬에서 동쪽 끝의 파푸아섬까지 거리가 5천100km에 달해 2시간의 시차가 난다. 전체 인구의 87%인 1억7천만 명이 이슬람교도로,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헌법으로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 5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냉전시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했던 비동맹운동(NAM)의 맹주 중 하나로, 1955년 4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이 중립을 선언하고 식민주의 종식을 결의함으로써 비동맹운동이 결성된 회의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다. 비동맹운동의 창설회원국으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외교를 견지하면서 비동맹 회원국인 북한과는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실질적 협력관계는 미미하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 경제·통상 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32년간 장기집권하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5월 물러나고 하비비-와히드-유도요노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하면서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산유국이자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지만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부터는 석유 순 수입국으로 전환했다. 2004년 10월 유도요노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금융·산업·고용 구조조정 및 규제 완화, 투자유치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 2007년 6.3%와 지난해 5%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달성했다.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 2008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약 1천20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인도 약 3만1천 명에 달해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5/21/0503000000AKR20090521143800043.HTML>